불교 외호 넘어 사회통합 발원 법석으로

전국승려대회, 의미와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 5000여 스님들이 결집한 전국승려대회가 여법하게 회향했다. 수십년간 지속된 종교편향 · 불교왜곡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스님들의 결의가 대회장 곳곳에 넘실댔다. 한국불교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수행자들의 책임을 직시하는 자성과 성찰의 모습도 포착됐다. 전국승려대회 봉행을 기점으로 그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의 모습.

1월 21일 봉행한 전국승려대회는 불교계를 넘어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법석이었다. 우선 불교계 내부적으로 승려대회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국 각지에서 5000여 스님들이 결집해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승려대회가 봉행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며,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이 모두 동참한 것은 사실상 최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산문을 폐쇄하고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까지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불교계가 대규모 결집에 나선 것은 그야말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문 스님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전국승려대회를 "조계종 종헌종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의사결의의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전국승려대회는 종단이 누란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고의 결의이기도 하다"며 "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과 불교폄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승려대회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종교편향 · 불교왜곡에 대해, 그동안 인내와 희생으로 수용했던 불교계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워 변화를 촉구하는 전환점이었다. 나아가 한국불교 자주권을 수호해 1700년 이어진 한국불교의 면면을 보존 · 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유의미한 법석인 셈이다.

때문에 스님들의 이번 결집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을 넘어, 진정한 사회통합과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불교계가 감내해 온 오랜 피해의식, 그리고 이로 인한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5000여 스님들이 전국승려대회를 위해 제도적 · 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다.

승려대회를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찬반 여론도 관심을 끌었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불교계 내부의 승려대회 반대 여론의 상당수가 '승려대회'라는 방식에 대한 우려였지, 취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신대승네트워크는 "스님들이 대규모로 결집하는 승려대회는 자칫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행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는 공감했다. 특히 "종교 편향과 차별 정책을 바로잡을 입법적 장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교육을 강화해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다종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승려대회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만 85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문자 설문을 진행한 결과, 601명(64.4%)이 반대, 301명(32.%)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만 85명 중 설문에 참석한 스님이 불과 10%에 못미치는 942명이라는 점에서 설문 자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전국승려대회를 향한 여러 시각들이 있겠지만, 불교계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확고하다. 더 이상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은 없어야 한다는 선언, 그리고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위법망구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것이다. 특히 종교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없는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서원은 이번 승려대회가 단순히 불교계 내부의 이익이 아니라 더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집임을 드러낸다.

다만 소수에 불과하지만 불편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불교계가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모인 결의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표명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한 교계 활동가는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는 것보다 이후 불교계 행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갈 지가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불교계 입장과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것으로 끝내선 안된다. 이번 승려대회가 궁극적으로 '규탄'이 아닌 진정한 다종교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 여당 규탄 결의로 가득해
참담한 현실 향한 자성 · 성찰도
승려대회 이후의 행보가 더중요
발전적인 변화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변화 · 제도 개선 필요
정부도 불교계 경책 들여다봐야

이미 정부와 여당의 사과와 개선약속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대표적으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승려대회 봉행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부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황 장관은 "전국승려대회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걱정이 많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불교계 오해를 풀고 정부가 바꿀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불교계 입장을 잘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의원도 승려대회 직후 잇따라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사과를 불교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황희 장관의 경우 원행 스님 예방에 이어 별도의 사과발언을 영상을 통해 전국승려대회에서 송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스님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중단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과발언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이 같은 분위기를 확인하고 긴급기자회견으로 대체했으며, 정청래 의원의 경우 아예 조계사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국회에서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불교계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정부여당의 사과나 개선약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전국승려대회 자체가 여론의 결집이기 때문에, 이같은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불교도대회가 예정된 2월 26~27일 이전에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정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를 우대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포용력을 갖고 평등과 공심으로서 모든 종교를 대해야 하지만, 과거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늘 그 반대 모습을 보여왔다"며 "범불교도대회까지 가지 않으려면 이번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먼저 경각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 민주당 사과, 스님들 항의로 중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승려대회 말미에 사과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발언기회를 얻었지만, 현장 스님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다.

이날 전국승려대회 말미, 예정에 없던 식순으로 정부여당의 발언이 진행됐다. 덕문 스님은 봉행위를 대표해 "승려대회에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승려대회 봉행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했고 이에 대한 참회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정청래 의원이 직접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이는 거절했다"며 "다만 봉행위원회 주요 스님들이 고심한 끝에 정부여당의 간곡한 청을 수용해 대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니 다소 견해가 다르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섭수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원행 스님 등 봉행위원회 스님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대한 현장 스님들의 여론을 수용해 영상상영 중단을 지시했다. 승려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발언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대기 중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결국 단상에 오르지 못했다.

송영길 대표는 조계사 후문에서 기자들에게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1,700여 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교계와 국민 여러분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모든 구성원과 함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한국불교가 수호하고 있는 전통문화와 유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승을 위해 불교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덕문 스님, "봉행위 고심 끝 발언기회" 양해에도
현장서 거센 항의…장관 영상 상영 도중에 중단
당대표 발언도 취소…정청래 의원은 국회서 사과

황희 장관은 영상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종무행정을 관장하는 부처 책임자로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편향 사례들을 미리 살피지 못한데 참회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평무사한 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종교사회로서의 모범적인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브라운관에 황희 장관의 인사말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되자 곳곳에서 스님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당장 꺼라" "뭐하는 짓이냐"는 격양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급기야 봉암사 등 일부 스님들이 자리를 박차고 대회장을 나가는 등 단호한 거부입장을 드러냈다.

'봉이김선달' 등 불교폄훼 발언으로 불교계 공분을 촉발시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승려대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계에 공식사과했다. 정 의원은 애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재차 사과입장을 밝히고자 했으나,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차원에서 거절해 조계사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국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몇 달간 저 스스로 많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고 불교계의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됐다.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전국승려대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황희 장관.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방의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출가 수행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5,0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하는 승려대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전국의 승려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한 목소리로 자주권 수호를 외치는 전국승려대회를 열게 된 것은 그만큼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는 코로나 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선제적 방역지침을 준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 한건의 집단 감염도 일으키지 않으며 방역의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템플스테이 등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심리적 방역에도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불교계에 돌아온 것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한 종교 편향이었습니다.
국공립 합창단에서 특정 종교 편향 연주회가 일상화되는가 하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이나 해미읍성, 천진암, 주어사 등과 같이 오랜 불교 역사를 가진 곳을 특정 종교의 성지화에 지원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정 종교에 의존하며 불교의 역할을 배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조계종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의원은 조계종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는가 하면, 계속되는 사과 촉구를 무시해 왔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0월 21에는 자신의 주장이 맞고 그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하며 불교계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보를 계속하였습니다. 불교계의 분노가 들끓게 되자 50여일 만인 11월 25일 사과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조계사를 찾아왔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인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교계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니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한 캐럴활성화 캠페인이었습니다. 연이어진 기독교인 국회의원의 불교 폄하와 천주교인 장관의 종교편향 정책은 이제 종도들 모두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함께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종도들의 뜻이 오늘 이 엄동설한에 전국의 승려들을 이곳 조계사로 운집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종헌종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의사결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승려대회는 종단이 누란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고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그런 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과 불교폄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조선왕조 500년에 걸친 억압을 견뎌왔고, 현대에 들어서도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법난과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종교 편향 정책에 맞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려대회는 이제 이 땅에서 부당한 종교차별과 불교 폄훼를 뿌리 뽑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한국불교의 자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이 땅에 종교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